

종합

광주·전남~경남~울산 연결

내륙 초광역벨트 추진

4개 지자체 공동 정부에 요청키로

가짜 친환경농산물 판친다

작년 2,438건 적발 ... 3년새 329% 증가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짜 친환경 농산물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적발된 부정 친환경 농산물이 2천438건으로 2006년의 568건에 비해 329%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같은 기간 친환경 인증 농산물량의 증가율인 94%와 비교할 때 증가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07년(1천114건)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과 친환경 인증 농산물

의 증가세는 이보다 완만해 2006년 7만4천995ha, 112만8천t, 2007년 12만2천882ha, 178만6천t, 2008년 17만4천107ha, 218만8천t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된 2천438건 중 82건은 행사 고발됐고 나머지 2천356건은 행정 처분을 받았다. 그중 2천114건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였다.

적발된 부정 친환경 농산물 유형은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허위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저농약 농산물을 무농약 또는 유기 농산물로 표시한 경우 ▲인증 취소된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표시한 경우 등이 있었다.

남해안권(부산·경남·전남)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경남 내륙지역과 광주·전남 일부 시·군·구, 울산을 연결하는 새로운 내륙 초광역개발 계획이 추진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전남도, 경남도, 울산 등 4개 시·도 공동으로 동해안~남부내륙~서남해안을 연결하는 내륙 초광역벨트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4개 지자체는 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에 초광역개발권으로 공식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내륙 초광역벨트 구축 사업은 남해안선벨트를 포함한 기존 4대 초광역개발권에 포함되지 않은 남부 내륙지역을 신성장축으로 개발, 행정 산관망과 문화권을 공동개발해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 전략'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게 광주시와 정부의 3차원 발전전략은 163개 기

조생활권(1차원), 5+2 광역경제권(2차원), 개방형 초광역개발권(3차원)을 말한다.

정부는 이 같은 개발권 지정에 건의하도록 지난 8월말 각 시·도에 지시했으며 경남 등 4개 시·도가 요청한 개발권 지정 외에도 새만금~포항을 연결하는 전북·대구·경북의 초광역개발권 등 전국적으로 몇 가지 구상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발구상은 동남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인 울산~함양고속도로와 현재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

88올림픽고속도로를 기본축으로 남부내륙 산림·생태·문화 등을 연계 활용한 성장축인형 녹색벨트를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 내륙 녹색성장벨트의 공간적 범위는 경남의 경우 내륙 7개 시·군을 비롯해 전남 6개 시·군, 광주 5개 구 및 울산 5개 구·군 등 모두 23개 시·군·구에 이른다.

이번 구상이 정부로부터 초광역개발권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의 법정 종합발전계획으로 채택되며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민간식 '떡볶이' 교과서에 실린다

'국민간식'인 떡볶이가 교과서에 실릴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학년도 중학교 2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에 떡볶이의 유래와 세계화 가능성, 다양한 떡볶이 조리법 등을 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교과서는 특히 떡볶이가 오늘날 퍼진 '저렴한 음식'이란 이미지와 달리 궁중 음식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소개한다. 고추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는 고추장 대신 간장과 나물, 쇠고기 등으로 만들었던 궁중 떡볶이가 조리법도 실린다.

/연합뉴스

여순 사건 국방부 첫 추도사

여순사건 발생 61년만에 정부가 지원하는 위령제가 열리고 국방부가 첫 공식 추도사를 했다.

여순사건 순천유족회는 20일 순천 팔마체육관 경내 위령탑 앞에서 희생자 유가족 등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여순사건 61주기 위령제와 고유제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난 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순천지역 민간인 희생자 439명의 명단을 확정, 유가족들에게 통보했기 때문에 위령제와 함께 이

같은 조사 사실 등을 희생자에게 알리는 고유제도 병행됐다.

또 이에 따라 국방부와 진실화해위는 각각 공식적인 추도사를 했다. 국방부는 31사단 여수 지역 연대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여순사건은 반군 진압 및 토벌 과정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었다"며 당시 사건의 본질이 어찌했든 많은 분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 기자 hagijaa@



사이버공격 즉각 대응 광주시는 20일 오후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사이버 침해대응센터 구축 완료보고회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위협이나 공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광주시 제공)

전공노 2년만에 지위 상실

해직간부 조합 활동 드러나 ... 사무실도 회수

정부는 20일 해직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법외노조화 하고 노조에 지원한 사무실을 회수키로 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2007년 10월17일 설립신고 하고 적법 노조로 활동해온 전공노는 2년여 만에 합법적인 노조로서 지위를 상실하면서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노동부는 전공노가 시정명령에 따라 전일 제출한 해직 간부 6명의 사퇴서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4명이 여전

히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나 법적인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전공노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등 임원 3명과 지역본부장 2명, 지부장 1명 등 선출직 간부 3명에 대해 1개월 시한을 주고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전공노 측은 6명을 탈퇴시켰다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지역본부장 1명이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알만한 사람이 속을 더 쑤신다

강력법 'DNA 뱅크' 만든다

조두순·강순호 등 3만여명 보관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죄자의 유전자(DNA)가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구적으로 보관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발의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DNA를 채취, 보관하는 대상범죄는 재범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

폭력범죄, 강간·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특수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등 12개 유형이다. 검·경은 이들 범죄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구강 점막에서 면봉으로 DNA를 채취하고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DNA 감시료 채취 명령'을 발부받아 강제 채취한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들 범

죄 혐의의 수형자를 비롯해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자, 구속된 피의자, 범죄현장의 유류품에서 채취한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간악하게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형이 선고된 조두순이나 사형이 확정된 연쇄 살인범 강순호, 유명철 등도 DNA 채취·반영구 보관 대상이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는 만 14세 이상 12개 유형의 범죄자를 기준으로 연간 3만명 안팎의 DNA가 저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금지

정부정책 반대행위 금지

공무원들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는 본인 이 명사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확립하기 위해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가 직무수행과 관계 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

책을 주장·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 가 담긴 조끼와 머리띠, 안장 등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는 당사자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서면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공무원노조는 시국선언이나 특정 정당이나 단체를 옹호하는 행위, 특정정당과 연대해 반정부 시위와 집회를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연합뉴스

산행 안내 16편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구직·운전·모집·초빙
영업·모임·매입·매매
임대·전세·부동산

이메일: design@kwangju.co.kr

• 직통: (062)227-9600
• FAX: (062)227-9500

상속한정승인공고

판 조동준(510113-1574814)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시간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공 고 인: 강옥연, 조장훈, 조명훈
한정승인수리일: 2009. 10. 15.
공고기간: 2009. 10.21~2009. 12.20(2개월)
연 락 처: 여수시 화정동 882
주공아파트 308-102
조 정 훈 (010-8745-3150)

금산공인중개사

T. 681-5866 H. 011-601-5354

(금호동 새마을역 건너 2층(도원))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용지 (C1지역)매매

위 치
상무병원, 롯데마트건너편, 삼성화재빌딩 옆(4면 광로변)

대 지
약2850㎡, 가격 협의중

• 근린시설, APT신축, 병원, 일반상가, 기타
• 중심상업시설 가능
• 최고의 교통접근(광주시청 접근성과 5.18 광로변)

• 광주 최고의 상권
• 최고의 입지 상업지역
• 현재 10층 신축건물 앞

부동산투자클럽

T. 011-641-0925, (062) 515-4985

▶ 펜션부지(광주호상류-가든식당, 과수원, 임야) 34,830㎡ 매매가 3.3㎡당 12만원

농지(무안군 운남면) 23,600㎡(바닷가, 계획관리지역) - 매매가 3.3㎡당 20만원

▶ 대지(신촌동) 784㎡(버스승강장, 전철역 5분거리) 매매가 ㎡당 38만원(원룸, 빌라, 물류창고적합)

고시텔(전대후문 체육공원 인근) 대 282㎡/건 560㎡ - (최근준공) 52(4층) 월임대료 23만원)매매가 8억5천

▶ 대지(복구 신안동)402㎡(물류창고적합) 매매가 3.3㎡당 150만원

상가주택(오차동 대단지 아파트 입구) - 대 496㎡/건 1487㎡ (6층건물) 매매가 17억

▶ 임야(남평읍 우산리) 16,811㎡(계획관리지역) 매매가 4억5천

농지(충효동-광주호상류)전 1,927㎡ - 각종 유실수 100여 주식제, 매매가 ㎡당 9만5천

▶ 가든식당(칠곡산국립공원 입구) 7,665㎡ 식당, 숙박업, 단란주점, 체육시설, 농장 모든시설 허가 필 - 매매가 3.3㎡ 당 32만원

경매부동산상당, 대출상당, 각종부동산투자상담

부동산투자클럽 공인 중개사 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0-3(용봉동 하이마트 옆)

HOMECON 홈컨 不動産 리서치

TEL: 062-233-2222 H·P: 010-3616-8698

태양광발전소 부지 급구함

■ 지역 : 전남·북, 기타지역
■ 용량 : 100KW이상~ 무제한
■ 조건 : 민원해결

개발행위허가
발전사업허가
완료된 곳

광주광역시 서구 처평동 1210-7 유지빌딩 501 (상무지구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사옆)

태양광발전소 및 사업인수

대 상
연간 기준가격 적용대상설비 발전소
-사용승인 후 현재 가동 중인 건
연간 기준가격 적용대상설비 선정 사업부지
-2010년, 2011년 선정 건

지 역 전국
규 모 200KW이상
기 한 2009. 10. 20
자금집행 서류 완비 후 1개월 이내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해와 땅**

상담문의 **010-7219-7123**